

## 600mm 비 심진강 뚝 터진 날 호남 9개 댐 4명이 통제했다

40만 만의 물난리를 몰고 온, 6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7~8일 광주·전남·전북권의 홍수 통제를 맡는 환경부 소속 영산강홍수통제소에는 홍수 통제 업무 직원이 단 4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 4명의 예보통제과 직원이 통제소장을 보좌해 광주·전남·전북권 주요 하천 홍수 특보 발령을 내리고, 영산강·심진강·탐진강·동진강에 소재한 9개 댐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취약한 인적구조였다는 지적이다.

하천·댐 관리의 경우 녹조로 대표되는 수질, 용수관리와 함께 방재 관리가 주요 기능인데도 최근 수십 년간 정부가 물 이용과 수질 관리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사실상 방재 기능이 망가졌다. 전문가 비판도 제기된다. 1991년부터 운영되던 심진강홍수통제소를 2005년 광주 농성동에 소재한 영산강홍수통제소로 통폐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3일 광주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 소속 기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의 현 인원은 총 30명으로 이 가운데 홍수 통제 업무 담당 직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이들 직원 4명과 함께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임한 댐 방류 여부를 결정하고, 광주전 등 광주·전남·북권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 예·경보 등 특보를 발령한다.

당시 영산강홍수통제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자로부터 수량 유입 상태, 수위 등에 관한 실시간 보고를 받기에도

### 광주 영산강홍수통제소

#### 수자원공사로부터

#### 실시간 보고 받기도 역부족

#### 수질관리 중점 방재에 무관심

#### 심진강통제소 통폐합도 영향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물난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심진강댐 방류의 경우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여부와 방류량 등을 결정하면 댐 관리를 맡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통제소의 명령을 이행하는 구조로, 홍수통제소와 댐 관리자는 지시·이행 관계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형태의 댐 관리자가 있는데도 홍수통제소를 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다. 공기업의 경우 이윤추구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흑자 경영을 위해 안전을 뒷전에 두고 '물장사'에만 골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큰 물난리가 없었던데다 정부의 물관리 방향이 수질관리와 이용에만 쏠리다 보니, 홍수 통제 업무를 맡는 인력과 조직이 쪼그라든 것이다.

전남대 이경훈 교수(토목공학)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하는 공기업이다. 홍수통제소가 댐수위·방류량 등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런 인적 구

조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심진강 물난리도 홍수통제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 사정에 밝은 다른 전문가는 "2005년 심진강홍수통제소 통폐합도 마찬가지다. 전국 5대 강 중 유일하게 심진강만 홍수통제소가 없다"며 "물난리가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니 방재 업무 분야는 늘고먹는 줄 안다. 영산강을 비롯한 전국 4개 홍수통제소에 물관리 전문가를 대폭 보강하고, 댐관리 공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심진강유역에선 심진강댐 홍수 조절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례·곡성·광양·순창·남원 등 심진강유역 5개 지역 자치단체장은 이날 '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통해 홍수조절 실패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기관의 수위조절 실패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며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사전에 댐을 비워두지 않고) 폭우가 계속돼 심진강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최대치인 초당 1870t의 물을 긴급방류했다"고 지적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심진강유역환경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홍수조절은 외면하고 물 이용에만 눈먼 댐 관리 정책을 폐기하라. 심진강댐 물관리를 실패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내일은 제75주년 광복절입니다" 해남군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군민광장에 400여개의 태극기 바람개비를 설치했다. 해남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기념 포토존으로 활용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다. 해남군은 이날 말까지 조형물을 유지, '광복의 달'을 기념하기로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나주·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 "광주 특별재난지역 지정" 5개 자치구 정부에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3시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남 8개 시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

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전남지역 재산피해 규모는 4000억원을 넘어섰다. 구례·곡성지역 상황이 속속 접수되면서 구례 피해액만 1200억원을 넘어섰다. 전남도가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집중호우 피해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4277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유시설이 2295억만원, 공공시설이 1982억원으로 전남보다 690여억원 늘었다. 주택 2790채, 농경지 7674ha, 축산 44만4506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 120곳, 하천 174곳, 상하수도 71곳, 산사태 105ha 등도 피해지로 집계됐다.

특히 구례·곡성 지역 피해 상황이 추가 접수되면서 전남보다 구례에서는 130억

원, 곡성에서는 446억원이 늘었다. 시·군별 피해액은 구례군이 126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담양 1154억원, 곡성 121억원 등이다. 화순 270억원, 장성 239억원, 나주 102억원, 영광 97억원, 함평 75억원 등으로 다른 지역도 피해액이 늘었다.

한편, 광주시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도로·하천·하수도·농경지·산사태 등 총 56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광주지역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집계된 5개 자치구의 피해는 동구 70억원, 서구 15억원, 남구 69억원, 북구 225억원, 광산구 184억원 등 총 565억원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국가균형발전 새로운 틀·방향 제시해야"

### 광주시장·전남지사 정부에 촉구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의 집중 투입,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대학·민간기업의 파격적인 이전 프로젝트 시행, 공공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선투자 등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특별기고 3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

시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각인하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국가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면서 국토 전체적인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나리와 지방을 동시에

살리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은 보다 획기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이후 세종시로의 행정 기능 이전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에 있어서 호남권만 소외됐으며,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호남과 강원을 축으로 해야한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불균형정책'을 통해 낙후한 호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BRO&T!PS**

**기름진  
형 피부엔?  
브로앤팁스 네버오일리 올인원**

**NEVER OILY**

ALL IN ONE

• 전국 아리따움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브로앤팁스 공식홈페이지 | www.brontips.com • www.instagram.com/brontips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록포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솔림 현상 ▶6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7면  
깜짝 트레이드 - KIA 미래 선택했다 ▶18면

17일 월요일 신문 쉽니다